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교정학개론 기출해설

- 임 현

1.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요시하였다.
- ② 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 ③ 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 ④ 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은 범죄인 처우 모델 중 정의모델(justice model, 공정모델, 사법모델)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의료모델이나 개선모델을 비판하고 공정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확보하고 동시에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델이다. 정의모델은 비결정론 내지 자유의사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고전주의모델의 하나이다.

실증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즉 소질과 환경 등 물리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통제되고 결정된다는 것으로서, 의료모델(medical model)이나 개선모델(adjust model) 등과 같이 결정론적 시각에서 범죄자를 사회적응에 결함이 있는 환자로 보고 치료의 대상이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당국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과는 거리가 멀다.

2.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③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④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9조 제1

항).

- ① 동법 제67조
- ② 동법 제44조 제2항
- ④ 동법 제71조

3.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 ② 범죄자의 처벌·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 ③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 ④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지역사회교정(Community based correction)이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범죄자에 대한 교정, 교화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교정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벌을 지역사회에서의 처벌 내지 교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처벌의 연속성이 유지되며, 형사제재의 단절이 아니라 형사제재의 방법이 변형된 형태이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 ②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③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즉 반드시 검열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열할 수 있는 임의적인 사항이다.

- ① 동법 제43조 제1항 제3호
- ② 동법 시행령 제64조
- ④ 동법 시행령 제67조

* 편지수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편지내용의 검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 수용자가 주고 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 편지 내용의 검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 소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편지를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또는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동법 제96조 제1항). 이 점에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용하는 보호실과 다르다.

③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96조 제

3항).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동법 제95조 제4항).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96조 제4항). 즉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6.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

①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견해이다.

②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한다.

③ 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다.

④ 범죄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의 감소에 둔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설문의 내용은 범죄피해의 원인에 관한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이다. 이 이론에서는 동기를 가진 범죄자, 적당한 범행대상의 존재 및 범죄방지의 보안장치 또는 감시인의 결여 등과 같은 요소가 결집되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일상활동의 구조적 변화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소에 시간적·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것이 결집된 경우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으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 교정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개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③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89조 제3항).

④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4호).

8.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② 자격정지의 선고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81조). 즉 본인인 직접 법원에 실효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므로,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② 형법 제82조

④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형의 실효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3. 벌금 : 2년

*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9.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é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 정답 : ②

☞ 해설 : ②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 범죄통계학의 창시자인 케틀레(A. Quételet)는 명역범죄와 암역범죄 사이에는 변함없는 고정관계가 존재하며, 명역범죄가 크면 그만큼 암역범죄도 크며 명역범죄가 작으면 그만큼 암역범죄도 작다고 하여 정비례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식적 통계상의 범죄현상은 실제의 범죄현상을 징표하거나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ㄴ. (×)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는 상대적 암수범죄이다.

ㄷ. (×)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는 처음부터 고소·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절대적 암수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ㄹ. (○)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는 직접적 관찰방법과 간접적 관찰방법이 있으나, 직접적 관찰방법은 실사가 쉽지 않은 점에서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한 간접적 관찰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③ 소장은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본문). 즉 '작업기술의 탁월'과 '작업성적의 우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단서

③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④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제3항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별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지(禁置)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의 징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징별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별을 실효시킬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소장은 징별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1조 제1항·제2항).

① 소장은 제108조 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금지처분 받은 사람에 대한 실외운동의 제한)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12조 제5항).

②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④ 동법 제115조 제2항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④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여관·음식점·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일시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4항).

② 동법 제103조 제1항

③ 동법 제103조 제2항

④ 동법 제103조 제4항

13.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

②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③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④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 의해 대다수의 일반수형자가 억압·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1914년 미국의 오스본(Osborne)이 조오지 소년공화국 제도를 오번(Auburn) 교도소에 도입하고 수형자 체험을 바탕으로 ‘수형자들의 상호부조연맹’이라는 자치제를 조직하여 시도한 것이 행형시설 최초의 수형자자치제이다.

14.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ㄱ. 정의모델(Justice Model)은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처우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 |
| ㄴ.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석방제도를 중요시한다. |
| ㄷ. 적응모델(Adjustment Model)은 정의모델에 대한 비판·보완을 위해 등장한 것으로, 교정처우기법으로 현실요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
| ㄹ.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사회도 범죄유발의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 정답 : ④

☞ 해설 : ④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 (○) 정의모델(justice model, 공정모델, 사법모델)은 의료모델이나 개선모델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의료모델이나 개선모델은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비결정론 내지 자유의사론적 시각에서 공정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확보하고 동시에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델이다.

ㄴ. (○) 의료모델(medical model, 치료모델)은 결정론적 시각에서 범죄자를 사회적응에 결함이 있는 환자로 보고 범죄의 원인은 치료의 대상이고 완치될 수 있다고 보는 모델로서, 치료 및 처우를 위한 교정당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치료가 되었다면 형기에 관계없이 석방될 수 있도록 가석방제도나 부정기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ㄷ. (×) 적응모델(adjust model, 개선모델)은 19세기 후반의 진보주의 및 교육형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1960년대에 의료모델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범죄자는 결함이 있는 환자로서 치료의 대상이며 동시에 범죄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심리상담, 종교상담, 직업훈련 등을 강조하고, 교정처우기법으로 현실요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ㄹ. (○)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 재사회화모델)은 결정론에 의거하여 범죄인의 개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을 동시에 중시하는 모델로서,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문제가 시작된 바로 그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한다.

15.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 제4항).

① 동법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③ 동법 제19조 제2항

④ 동법 제21조 제1항

* 국선보조인의 선정(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제2항)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9조 제1항).

③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금품을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④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형집행법 시행령상 ‘휴업일’은 공휴일과 토요일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동법 시행령 제96조), 휴일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 ②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 ③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 ④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④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제246조 제1호의 사항(신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 제1

항). 그리고 사전조사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실시하는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동법 시행규칙 제249조 제3항).

- ① 동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
- ③ 동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제2항
- ④ 동법 시행규칙 제251조

19.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ㄴ. 흘형제도(恤刑制度, 또는 흘수제도(恤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減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ㄷ.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ㄹ. 1895년 「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정답 : ①

☞ 해설 : ①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 (○) 조선시대에는 형률의 적용에 있어서 관리에 의한 자의를 방지하고 남형을 금지하기 위하여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아문이라고 하여 경국대전 등에 명시하였고, 형조, 한성부, 사헌부, 병조, 승정원, 수령 등의 직수아문에는 감옥시설이 부설되어 구금기능을 담당하였다.

ㄴ. (○) 흘형제도(恤刑制度)는 죄인에 대한 수사나 신문, 재판 또는 형집행의 과정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진행하되, 그 처리를 신중하게 하고 죄인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 성심껏 보살피며 용서하여 죄수를 보호하는 조치로서, 조선의 모든 형사법전에는 반드시 흘수(恤囚)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억울하게 옥에 갇히거나 죄수의 처우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며, 삼국시대 이래 흘형을 실시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역대의 왕들이 이를 선정(善政)의 지표로 삼아 중시하여 폭 넓게 시행되었다. 조선시대 흘형의 종류로는 보방(保放), 감강종경(減降從輕), 사면(赦免)제도 및 각종의 인권보호조치 등을 들 수 있다.

ㄷ. (×)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는 태형(笞刑)보다 중한 벌인 장형(杖刑)이 병과되었다.

ㄹ. (×) 1895년 '징역처단례'를 제정하여 5형 중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은 징역으로 바꾸었으며 유형은 국사범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09년(융희 3)에 일본에 사법권이 넘어갈 때 유형은 일본 형법의 금고(禁錮)로 간주되어 유형제도는 폐지되었다.

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③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임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동법 제11조 제2항).
- ② 동법 제23조 제1항
- ③ 동법 제29조 제2항